

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9.11)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31호, 2016. 1. 13.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9년 1월 12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프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프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 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프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프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프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3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두께가 9마이크로미터(μm)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2. 비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縁用)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규격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y Inc.)에서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05도 이상이고 흐림도(Haze)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모델명Garfilm EM6(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J-470(인도 Jindal Polyfilms Limited 제품)

3. 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규격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에서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이 각각 섭씨 140도, 125도 이상이고 소중합체(小重合體, Oligomer) 추출비율이 0.65퍼센트 이하이며 흐림도가 75퍼센트 이상일 것

나. 모델명Garfilm EM6-L.O.(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4. 홀로그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5. 안료를 다른 원재료에 배합하여 생산한 유채색(有彩色)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두께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별표 2]

덤프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프방지관세율(%)
중국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51

자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이화 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와 그 회사의 제	품을 수출하는 자	36.98
장수 중다(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	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티에스에프(TSF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상하이(Shanghai 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그 밖의 공급자		23.61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0
인도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0
	그 밖의 공급자	34.90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37호, 2019.9.10)

◇ 개정 사유 ◇

-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용도와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기간 단축 등 업체 부담 완화
- 민관합동규제개선단(국조실), 반도체산업협회 등 건의 수용

◇ 주요 개정내용 ◇

-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신설(제11조, 별표 2 등)
- 학술연구용 관세 감면 물품이 과세 가격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세관에 사 후 관리 면제 승인 신청 가능
- 물품 특성, 용도에 적합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별표 2)
 - 원재료·부분품·건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된 후 3개월 이내 소모될 경우, 사용 장소에 ‘반입사실이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용도와 사용 금지 기간)으로 정함
 - 학술연구용 등 기계·기구는 내용 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 ‘설치 완료가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 간으로 정함
-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조문 정비 등
- ‘반도체 제조용 자외선 램프’(8539.49-1010)를 용도세율 적용 신청 대상 물품으로 추가(별표1의 가)
- 사후관리 종결 신청서, 사후관리 결과 확인 보고서를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로 통합(별지 제14호 서식 등)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전문, 별표, 별지서식, 신규대조표 : www.custra.com 참조

3.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을 방지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부여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근거 마련(제106조제6항 신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 신설(제107조제2항 신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결정이 있는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 요건 합리화(제192조의2제1항제3호)

세관장은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해당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제2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 「관세법 제246조의 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8-21호, '18. 6. 27)

2. 개정 사유

- ☐ 효과적인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업 확대
- ☐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검사 체계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3. 주요 개정내용

- ☐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지정 등으로 인한 규정 정비
 - * 고시 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별표1(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 의료기기(의료기기법) · 방사능 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의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 지정
 - 부처 내 업무 이관(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전파시험인증센터)
 - 기존 운영 중인 폐기물 협업분야 변경(수입→수출입)
- ☐ 안전성 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 기존 부서 간 서류를 인계하여 처리하던 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 협업검사센터에서 위험관리센터로 직접 선별기준 적용 요청 절차 마련
- ☐ 기타 규정 명확화 등 용어 정비

4.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 “불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19. 9. 23.

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 - 17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WCO 품목분류 결정사항(제60차 HS위원회)을 반영하여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를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

나.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팩(3307.90-4000)’ 및 ‘탄소난방필름(8545.90-2000)’에 대한 품목번호를 신설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일부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 10월 1일 발효

5년여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한·중미 FTA가 국회 비준절차를 마치고 10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3개 국가와는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국회 의결 후 상대 국가에 통보한 날(8월 9일) 이후 2번째 달 1일인 10월 1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로, 한·중미 FTA 발효 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총 57개국 16개의 FTA로 늘어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게 된다.

산업부는 최근 美·中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중미 FTA를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對美 수출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 기업이 중미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이로써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한편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 새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기로 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누적 기준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 9,000만 달러 개선되며, 일자리는 2,534개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7. 인천세관 수출입화물 등 국제물류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여부 확인 요청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6238(2019.9.20.)과 관련입니다
- 인천세관은 인천공항만의 수출입물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험관리 관점을 화물 중심에서 포워더 중심으로 전환하는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 동 대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설명회, 언론보도, 미등록 포워더 등록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미등록/무자격 포워더의 세관 등록을 유도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포워더는 관계 법령(물류정책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른 등록(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회원님의 통관업무 수행중 관련 포워더가 관세법상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미등록/무자격 포워더인 경우에는 인천세관 <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customs04010@korea.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인천세관은 10월1일부터 미등록 포워더가 수출입화물 등 국제물류 주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무자격/미등록 포워더와 거래하는 물류업체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 032-722-4027

8. 관세청 질의 응답 사례

【 수입·FTA·원산지 】

1.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질의>베트남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입자 측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세관에 방문해야 하나요? 발급 신청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참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참고로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규칙 제10조 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 개인물품 통관 】

2. 이사물품(자동차) 세금 부과

<질의>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승용차를 갖고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이사물품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 (Kelley Blue Book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가령 2014년 6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비영업용)을 2019년 8월에 수입하는 경우 대략 경과연수는 5년 2개월로 차량의 잔존율은 34.58%입니다.

∴ 따라서 과세가격은 (신차가격 × 34.58%) + 운임 + 보험료를 합한 가격입니다.

∴ 과세가격에 적용될 세율(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 약 26.52% (배기량 1,000cc 초과)

-과세가격 × 약 18.8% (배기량 1,000cc 이하)

∴ 또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조회업무 서비스(우측 상단) >예상세액 조회 > 이사화물 자동차’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자동차는 통관 후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타인 명의 불가).

한편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더라도 세관통관 후 자기 인증,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 면제 여부 등을 해당 부서에 확인한 후 자동차를 반입해야 합니다.

-자기 인증 : 자동차 안전연구원(031- 369-1100)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032-590-5000)

3. 나이프(도검류) 해외 직구 시 통관

<질의>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이프를 구매하려는데, 통관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

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도검의 종류로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그 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 총포, 도검류 등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이 도검류에 해당하는지는 지방경찰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9. 조세심판 결정 레【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 요지>

「세관장 확인고시」의 목적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확인방법·확인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야 하므로 「세관장 확인고시」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나, 다만 의료기기인 쟁점물품의 특성상 최종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000장의 품목분류 및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 정 번 호: 조심2019관0022(2019.8.26.)

▷청 구 법 인: 000

▷주문: 처분청이 2018.11.6. 및 2018.12.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7.부터 2014.12.12.까지 000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 확인고시」라 한다) ‘[별표2]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상 ‘의료용 000’과 연계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9.20-0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19호’라고만 한다)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제8419호가 아닌 HSK 제8479.89- 9099호(기본관세율 0%, 이하 ‘제8479호’라고만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 5.9.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변경 및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000원(「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함께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9.7. 및 2018.10.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84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6. 및 2018.12.1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관장 확인고시」상 품목번호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신고하였다.

쟁점물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물품 요건확인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고, 「세관장 확인고시」는 요건확인 물품을 HSK 10단위로 연계하여 고시하는바, 청구법인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세관장 확인고시」상 ‘의료용 000’에 연계된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제8419호인 것을 확인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다음,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장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관장 확인고시」에서 ‘의료용 000’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고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8년 4월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4.6.11.자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000 등 대기업 3개 업체 및 다

수의 중소기업이 신고한 동종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의 오류를 안내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장기간 동종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19호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인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4.6.11.자 품목분류 사례가 나오기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8419호임이 분명하다.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잘못된 품목번호를 「세관장 확인고시」 제10조에 따라 장기간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를 신뢰하고 그 품목번호 대로 신고한 납세의무자들에게 소급하여 품목번호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청의 행정안내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8419호에 분류되는 살균기는 가열이라는 온도변화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기로 한정되는데, 쟁점물품은 산화력이 뛰어난 과산화수소를 저온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분해하여 살균작용을 하는 기기이므로 제8419호로 분류될 수 없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7년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유사물품을 일관되게 제8749호로 분류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19호라는 전제 하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당당하다.

(2) 이 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수입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요청을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대상물품·확인방법·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고, 「세관장 확인고시」 제8조 제1항에서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청한대로 요건 확인대상 물품과 그 품목번호(HSK 10단위)를 공고할 뿐인바, 이때의 품목번호는 세관장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요건 확인대상 물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분류한 참조번호에 불과하고,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련 해설서 등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청한대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의료용 000’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9.20-0000호로 공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49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6.9. 선고 2010누27624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과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관세법」 상 품목분류는 그 목적과 조건을 달리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채 「세관장 확인고시」 상 품목번호만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을 제8419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입자로서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이 있다.

(나)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그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결정하여 왔는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79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 등이 존재할 뿐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19호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발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①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

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8조(확인요청)① 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요청내용·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방법)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관장 확인고시」 <별표 2 :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에서 의의기기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에서 품목번호 제8419호(제8419.20-0000호)에 ‘000’이 고시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의료산업기기협회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였고, 한국의료산업기기협회장은 이를 수리한 다음 처분청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5. 청구법인에게 이메일(e-mail)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을 제8479호로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4과-6899호, 2017.10.12. 및 품목분류2과-3884호, 2014.6.11.)와 처분청의 검토내용 등을 송부하면서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5.9.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변경한 후,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세율 차이(8%)에 해당하는 관세 등 합계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9.7. 및 2018. 10.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84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6. 및 2018.12.1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온도변화가 아닌 가스 등으로 살균하는 살균기를 제8419호가 아닌 제8479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